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조경완



목하 거대조직 삼성을 상대로 '인 전 쟁'을 벌이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국민적 응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그의 폭로가 처음 나왔을 때 만 해도 삼성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다수 매체들이 기묘한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지만 2탄, 3탄 터뜨리는 그의 새로운 폭로앞에 외면을 계속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있다.

국민들이 '김의 전쟁'에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폭로가 죄다 사실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뒤를 받쳐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그의 폭로가 유례없이 구체적이라는 점. 자신도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시시한 양심선언들과는 다른 파괴력을 갖기 때문이다.

박수와 힐난 기묘한 양존

검찰이 이 거북한 사건을 마침내 추켜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실이 가려져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영리한 민심은 이미 이 가련한 고발자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변호사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다. 배신자라는 것이다. 고액연봉을 받고 호강하던 사람이 이제 옛 주인을 물어뜯는다는 비난이다. 변협은 의뢰인에 해당하는 삼성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 변호사 윤리에 위배된다고 그를 징계한다고 한다. 그

그의 고향에 가슴 철렁한 까닭은

가 성격상 결함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그의 부인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일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도덕적 결함을 덮어씌우는 건 지켜온 레퍼토리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제보한 '딥 스룻'이 돈을 원했다고 해서 리처드 닉슨이 결백해지지는 않듯, 내부고발자의 개인적 흠결이 고발 자체를 퇴색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김변호사에 대한 비난중에는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말이 포함 돼 있다. 그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의 폭로

직후부터 나돌던 이 말은 서울 재계에선 이미 몇바퀴 회자됐다는 소문이다. 파문한 박춘의 서생이 부라부라 그의 내력을 알아본즉 올해 마흔아홉인 그는 광주 태생으로 광주일보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거대기업의 비리를 고발한 용기있는 변호사가 광주출신이라면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왜 가슴이 철렁해지는 걸까. 두말할 것 없이 호남사람 삼성서 임원되기는 이제 틀렸다는 탄식, 젊은이를 이력서도 넣기 어렵게 만드는 격정이 드는 걸 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 뿐이겠는가. 대기업

들간 보이지 않는 조리돌림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좀 풀린듯 하던 호남출신 장벽이 또다시 둘러쳐지리라는 불길한 예측도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무슨 시대착오적인 지역타령이냐고 애써 외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중구조, 이상과 현실·명분과 실리·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기성세대들은 '악마의 주술'이라는 지역감정이 여전히 살아있음도 안다. 재벌의 오랜 악습을 타파하고 세계 일류기업 삼성이 거듭나도록 햇볕을 들뜨다는 김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방 '내

회사, 내조직에는 저런 돈키호테가 없어야 할텐데'라고 우리국민 각자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단 얘기다.

고발자 출신지 따져서야

어느시대나 내부고발자는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한다. 1990년 감사원의 이문욱 감사관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내역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된 사실을 폭로했지만 공무원 기밀누설죄로 파면됐다. 1996년 효산콘도비리 감사 외압중단 의혹을 폭로했던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992년 광주지법 목표지원 방희선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이 시국사범을 풀어주지 않자 검·경을 고발했다가 범포제 왕따가 됐고, 5년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민간인에 대한 보안사의 불법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군 부재자투표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이진로 중위도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

당대엔 위태로와 보이고 어려서어 보이는 이같은 고발들은 분명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고발자들은 역사발전의 희생자들이다. 고발자들의 용기를 치하 하면서도 출신지와 개인성향을 들추는 모순은 이제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편집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도 넘은 지자체 예산낭비 주민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 방만 경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지방의원의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서 보듯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눈먼 돈'처럼 평평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2년간 적발한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는 지방의원 의정비 문제를 제외하고도 116건에 달했다. 그 실태를 보면 가관이다.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 거의 이용객이 없는 곳에 5여6천만원을 들여 육교를 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버스를 노선에 한 번도 투입하지 않은 버스타사 매번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갖가지 탈·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태다. 단체협약에 '연 4회 체육·문화 행사' '성희롱 피해자 최장 2개월간 병

가' '퇴직 예정 공무원 가족 여권 지원' 등 도덕적 일탈행태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보성군은 읍·면 일요일 당직을 집에서 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공개하고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이 '자율' 운운하며 반발할 경우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다. 주민들이 '자율'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소송제'나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직접 감시와 견제에 나서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속빈 강정'에 그친 고유가 종합대책

정부가 13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핵심인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유가 대응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무색할 수밖에 없다.

종합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지원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등유,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LNG 등 동절기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올리고 동절기 난방비 7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대책으로는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이 시행되면 난방용 유류세와 부과금 인하로 5천86억원,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로 2천637억원, 광열비 지원 확대로 1천494억원 등 1조775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작 1조원짜리 지원정책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반대의 근거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깎는 나라가 없고 휘발유 가격보다 국민소득이 더 올랐다는 점을 들었다. 아직 참을 만 하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는 사상 유례없는 유가 폭풍을 맨몸으로 맞게 됐다.

우리나라만큼 소득 대비 유류세가 비싼 나라는 없다. 1인당 GNI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휘발유세가 일본의 다섯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을 '방'으로 여기지 않는 한 휘발유값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걷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거부했다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을 통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바야흐로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정을 위한 고민이나 열정이 그다지 많이 담겨있지 않은 모양이다. 왜 그럴까? 이미 여론 조사 등을 통해 특정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 이미 결과를 보거나나 뻔한 것이기에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

특정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실낱살이 이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과 무슨 일이든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 일사

누웠고 결국 미국노들에 의해 국가와 민족이 지구상에서 종말 되었다.

뉴딜정책으로 통해 미국의 경제공황을 타개하려던 루즈벨트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다 "당신이 정말로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자 루즈벨트는 "아니다 나는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 잘사는 것은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결코 대한민국이 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수한 민족적 유전자를 지녔고 게다가 악착같이 부지런하기 까지 하다. 그럼에도 될

경제대통령과 도덕성

천리로 처리해줄 것이라는 것이 그가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과연 경제대통령이 탄생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이 폭발하는 사회를 마치 군인들이 제식 훈련하듯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도덕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부도의 위기에 섰던 IMF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총체적인 부패의 사슬의 결과였다. 구한말 일제로부터 주권이 침탈당할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양심과 책임감 있는 충신들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매국노로 나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이 회박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도덕불감증에 푹만 빠진 반면 그 과정은 아무도 탓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도덕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다.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부도덕성에 대해 양심선언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선후보들의 자질 검증에서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발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삶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 남은 기간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석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삼성비자금 의혹·'떡값' 검사 철저히 수사해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3명을 공개해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진뒤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단서를 확보하고 발표했으니 전혀 허위는 아니라고 보고 이들 명단이 검찰간부급이나 심지어 청렴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또한한 국민들을 분노와 실의에 빠지게 한다.

이 정도의 정황이라면 이제 검찰은 진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혹시 고위직 검찰이 관여되었다 하여 회피하거나 무성의하게 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더

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사제단의 발표는 돈을 전달한 정황과, 검사와 전달자의 인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상당히 신빙성과 실증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고 본다. 더구나 관련 인사들은 모두 '떡값'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더욱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뼈를 깎는 아픔과 자상으로 꼭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전직 총리나 장관, 범포제 유명인사 등이 대거 삼성의 고문이나 임원, 법인법무팀에 들어가 권력과의 유착이나 로비 혐의가 충분하므로 차제에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기고

조학행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이에 따른 물동량의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제 규모 확대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장거리 항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해상에서의 선박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선박량의 증가는 많은 선박들이 새롭게 건조돼 운항에 투입된 결과이지만 그만큼 노후선박들이 폐선을 마무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후선박은 구조·설비가 열악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선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항만국통제관은 선박점검 후 발견된 결함사항이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에 따라 출항정지 시정, 기한부시정,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항만국통제관은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국제법과 외국어 능력이 갖춰야 한다.

선박이 출항정지를 당하면 회사는 금전적인 피해, 화주로부터 운송계약 해지 등 영업상의 불이익과 출항정지선박의 선박검사기간 및 국가는 국제사회의 신뢰성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만국통제관은 국제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평화

외국선박 철저 점검이 안전한 바다 만든다

대부분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전통적으로 선박은 떠다니는 영토로 여겨져 자국선박이 아닌 외국선박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UN해양법 및 각종 국제해사협약

본문에 항만국(선박이 입항한 국가)이 외국선박의 설비, 구조 및 안전관리체제가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이래 1988년부터 전체 무역항에서 시행하였으며 현재 여수·광양항에서도 5명의 항만국통제관이 연간 500여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항만국 통제 제도는 자칫 무역 보복 수단이나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민감한 외교적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어 어느 나라나 민간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선박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련 조문 검토와 더불어 국제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에서 외교관 역할도 수행하므로 전통과 문화가 각기 다른 외국 선원들에게 항상 조심스러운 언행과 친절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항만국통제관의 잘못된 인정되면 선박 출항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올 4월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해양안전체제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 세계 최대 해운·조선국 위상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오늘도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홀로 당당하게 선박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항만국통제관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항만국 통제관이 있는 한 우리의 바다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사고 공탁금제 개선책 마련을

친구 아들이 두달 전 학교 앞 스크램에서 왕복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였다. 왼쪽과 다리에 전치 3개월 부상을 입고 수술 뒤 20일 넘게 깁스를 해야 했다. 나중에 등교를 했지만 다시 학교를 쉬어야 했다. 전교 1~2등을 다룬 친구 아들은 결국 이번 대입시마저 포기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데 가해자측은 형사 합의금 300만원

을 제시한 뒤 합의가 안 돼도 그 돈을 공탁금으로 걸어두면 어차피 범행형이나 징역유예 판결을 받게하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공탁금 제도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Advertisement for 'Incheon University' (인재 유출) with text about international education and university ranking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